

영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안	52
번호	

제출년월일 : 1999년 월 일

제 출 자 : 영 주 시 장

1. 폐지이유

각종 호적신고 지연시에 부과하는 호적과태료는 현행 호적법시행규칙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정하여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할 수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호적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영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함

3. 폐지조례(안) : 덧붙임

4. 참고자료 : 덧붙임

가. 관련법령(발체) 1부.

나. “호적선례요지집”제3권중 질의회신(발체)1부

영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영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령(발췌)

[호적법]

제130조 (과태료) 이 법에 의한 신고의 의무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31조 (과태료) 시·읍·면의 장이 제43조 또는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신고 또는 신청의 최고를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32조의2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제130조 및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읍·면의 장(제25조의2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출생·사망의 신고를 받는 동의 관할 시장·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이를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30일 이내에 당해 시·읍·면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읍·면의 장으로부터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시·읍·면의 장은 지체없이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가정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 (과태료의 부과) ①법 제1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는 신고 또는 신청을 수리하거나 이를 최고한 시·읍·면의 장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을 명시한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자진하여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출생·사망의 신고서를 받은 동의 장은 소속 시장·구청장을 대행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⑤삭제 <95.12. 26>

⑥시·읍·면의 장은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 과태료처분이의서를 과태료처분을 한 시·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접수한 시·읍·면의 장은 이의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한 통보서를 지체없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별표] <개정 95.12. 26>

과태료 부과기준

해 태 기 간	과 태 료	
	제130조위반	제131조위반
7일미만	10,000원	20,000원
7일이상1월미만	20,000원	40,000원
1월이상3월미만	30,000원	60,000원
3월이상6월미만	40,000원	80,000원
6월이상	50,000원	100,000원

사법행정간행물등록번호
100200-3201-67-9623

『호적선례요지집』

제 3 권
(1992. 7 ~ 1996. 8)

649. 호적신고 해태시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을 자치조례에 의하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호적신고 해태시에 부과하는 과태료는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의 개정 전에는 호적법에 규정된 금액을 상한으로 하여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와 과태료처분 대상자의 학력·생활정도등을 참작하여 시(구)·읍·면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현행의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 제6항에서는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시(구)·읍·면의 장은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 제6항의 별표에 의하여 해태 기간에 따라 정하여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 자치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1996. 3. 14. 법정 3202-70)

참조조문 : 법 제130조, 제131조, 제132조의 2, 규칙 제52조